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 성 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49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28일

발 의 의 원 : 김성태, 김동식, 김원규,  
김태원, 박갑상, 송영현,  
윤영애, 이태손 의원(8명)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선분양 후입주의 공급방식에 따라, 완성된 주택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견본주택이나 평면도, 조감도 등의 제한적이거나 왜곡 또는 과장이 가능한 정보에 의존해 분양신청과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입주 전후에 이루어지는 현장 확인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공사품질을 확인하기 힘들며, 특히, 조경시설이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의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입주이후 공동주택 품질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어,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검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등의 검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안 제2조)
- 나.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한, 공동주택 사용승인 권한 등 행정권한, 대 시민 행정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검수자문 대상을 대구시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 중 구청장·군수가 검수자문을 요청하거나 분양계약자 등이 요청하는 단지 등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의 시공상태, 하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등의 자문사항을 명시하여 충실한 품질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수를 70명 이내로 하되 개별 단지의 검수 자문을 위한 1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간사와 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함께 고려하였음.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11조)

라.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시공자나 자문 업무에 대한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단지에 대한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안 제1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주택법」, 「대구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완료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건설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점검 등의 검수(이하 “검수”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검수자문 대상 및 범위)** ① 위원회의 검수자문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로 한다.

1. 시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장 중 구청장·군수가 품질점검을 요청하는 공동주택 단지
2.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점검을 요청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단지

3. 그 밖에 시장이 분쟁, 부실시공 등이 발생한 단지를 비롯해 품질관리를 위해 검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단지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1. 건축물의 구조 및 내·외장재, 창호 및 방화문, 냉·난방시설, 조정시설, 주차장, 안전 및 범죄예방시설, 재난 및 재해 예방시설 등 공동주택 단지 전반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결함과 하자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방안 및 시정 이행여부의 확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4.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계획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양계약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검수자문 시기)** ① 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공사의 공정률이 95%에 도달한 때에 검수자문을 실시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시공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정률에 따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품질에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면, 제1항에서 정한 공정률 이전에도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수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소위원회)** ① 효율적인 자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소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문대상 단지의 규모나 특성,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한 위원이 중복해서 다른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나이,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 조경, 토목, 경관, 안전 등 공동주택 건설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건축, 토목, 조경분야의 5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4. 구청장·군수,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대표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건설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회의 수당 또는 여비의 지급을 비롯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검수업무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이 우수한 단지의 시공·감리자나

업체, 검수자문 업무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위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시공단지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 받은 업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은 검수 자문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 ⑥ 생략

## 【대구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 건축주택과】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도시계획 정책관, 건축주택과	1	생략		
	2	<u>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승인취소 및 사업착수신고 등</u> (다만, 區 지역내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계획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승인취소는 제외한다)	「주택법」 제16조	

	3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교체·지정제한과 감리업무 수행보고 및 이의신청 등(다만, 區지역내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 교체 및 지정제한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4조	
	4	생략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위원회의 소속,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행자
  - 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이의신청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 분야(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전문가 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비공개한 부분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 및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여성위원 추천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계획

### 3. 위원회 예산 현황 등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및 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나.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3.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이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